

더불어민주당 내달 10일 전후 분당 빅뱅

비주류, 광주·전남 선거구 확정 후 연쇄탈당 가능성

박지원·김한길 결심 굳혀...동교동계 동반탈당 임박

安 창당발기인대회·선출직 평가위 활동 종료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여부가 내년 1월 10일 전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문 대표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비주류 진영 의원들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민심의 흐름과 정치권의 상황을 주시하며 탈당 결행 시기를 조율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비주류 의원들은 연말연시를 지낸 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선거구 확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오는 8일 이후에 탈당 결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월 초순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 보고회 마감(13일)시기인데다 현역 국회

의원 20%를 물갈이하는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활동 종료 시점(12일)과도 맞물려 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의 창당발기인대회도 오는 10일 치러진다.

이를 반영하듯 전남의 주승용 의원은 이미 10일을 전후해 탈당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일단 선거구 확정기 마무리 된 이후에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도 내달 10일 이후에 탈당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무소속으로 심판받는다 배수진까지 치고 통합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 보겠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다”며 “저도 김한길 전 대표도 (탈당의) 결심을 굳혀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단히 생각을 공유하고 미래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의 분당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외부의 탈당 흐름은 급류를 타고 있다. 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던 호남향우회 현직 임원들이 오는 30일 집단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전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에 합류키로 했다. 여기에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의 동반탈당도 임박한 상황이다.

인천 지역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한광원 전 의원과 인천 민주연합전원회

(연정) 회장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하는 등 원외 인사들의 개별적 탈당 흐름은 이날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연초에 발표될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도 분당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분당 국면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담보상태를 보이거나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비주류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 가면서 탈당의 흐름은 담보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사태 현실화 여부는 결국 여론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연초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분당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목기자 tuim@kwangju.co.kr

“탈당 의원들, 사과후 백의종군해야”

‘정치혁신 한걸음 더’ 성명

문·안에 혁신위한 결단 촉구

광주·전남 정치신진 모임인 ‘정치혁신 한걸음 더’는 29일 야권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선 탈당과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백의종군하는 등 책임감 있는 결단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야권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선 문재인·안철수 두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파·개인은 기득권을 버리고 재창당에 준하는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새 출발은 문재인 대표의 결단에 있다는 것이 호남과 아권지지층의 민심”이라며 “안철수 신당도 새로운 정당정치의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지만 최근 신당추진의 흐름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탈당한 호남의원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그간의

잘못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며 “진심으로 새 정치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백의종군 하는 등 책임 있는 결단을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야권의 위기가 한국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근본적 혁신과 안철수 전대표의 신당추진이 야권의 지형을 확대하고 수권 능력을 확대하는 길로 나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원동력으로 발휘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치신진 모임에는 김민중·김보현·임태·조오섭 광주시의회의 의원, 강성휘·문영주·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 정진욱 광주정치경제아카데미 원장, 강용주 제대법원 진실의힘 이사,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갑석 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 이남재 동아시아미래재단 전라기획본부장, 이상갑 변호사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손학규계 김유정 곧 탈당

광주 북갑 강기정에 도전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계인 김유정 전 대변인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광주 북갑에 출마, 범주류 3선 의원인 강기정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29일 “탈당 결심을 굳혔다”며 “광주 북구갑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북구갑은 강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낸 곳으로 또 다른 손학규계인 홍인화 전 광주시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인 지역이다.

김 전 대변인은 “북구에서 중학교에 다니기도 해 인연이 깊지만 그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출마 지역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탈당 후 선택할 신당에 대해서는 아직 고심 중이다.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신당 쪽에 마음이 기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광주 출신으로, 1991년 대학 졸업 직후 신민주연합당(신민당) 창당에 발기인 참여하면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의 당직자로 일한 뒤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 당 대변인을 지냈다.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손학규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8 전 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쟁점법안 결론 내시다” 새누리당 조원진(왼쪽)·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동,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쟁점법안 연내처리 기대감

상임위 회동 빈손 종료...테러방지법 등 이견 좁혀

여야는 29일 오전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

여당은 앞서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릴레이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했던 쟁점법안의 조속한 합의를 주장했다. 야당이 각 상임위 간사 간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1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끝

냈다. 다만,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기업협력제고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다 했다고 보면 된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탄소사업 진흥법도 원유철 원내대표가 받겠다고 해

서 내일 법사위를 열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의 경우 수정된 문안을 야당에 제시했고, 원샷법도 야당에서 제안한 부분을 주무부처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개별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릴레이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수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을 일부 받았다”며 “양당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 절차를 더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수석은 “31일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선거구 없어져도 선거운동 가능할듯

선관위, 관련 대책 이르면 오늘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해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더라도 예비후보자가 계속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현재 선관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예비후보자들이 주어진 선거운동 기회가 박탈되는 것과 그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법적 검토도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그것을 포함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 밝혔다.

관계자는 “이르면 30일이나 31일에는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1일까지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확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구가 원천 무효가 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홍보물을 발송하는 게 금지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60조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예비후보자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선거구 무효화에 따른 예비후보자 신분 상실 시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월 1일 이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바로 단속을 나서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그 문제는 선관위의 정책적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원외 인사들도 사실상 선관위가 1월 1일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현재 수도권에서 선거운동 중인 여권 원외인사 선거캠프 관계자는 “만일 선관위가 내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할 거였다면 진작 안내 지침을 내렸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또 현재로서는 내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확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여드레 동안의 선거구 공백 때문에 선관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에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2016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지원안내 및 교육기관 모집

1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지원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기술 등 업종별 전문기술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0,000명
- 지원내용 : 민간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교육비*의 70%(40만원 한도)를 연간 1회 지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있는 교육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
- 신청방법



2 전문기술교육기관 모집

- 신청자격 : 아래에 해당되는 교육기관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교육기관은 제외
 -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된 학원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평생직업교육학원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따른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직업전문학교
- 접수기간 : 2015. 12. 30(수) ~ 연중 상시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042-363-7821)
 -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 참조